

비박 32명 “탄핵”...남경필·김용태 탈당 예고

박대통령 징계안 제출...출당 움직임 본격화

친박 “패륜·배신” 맹비난...계파 갈등 최고조

새누리당내 계파 갈등이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다.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한 비주류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출당 움직임을 본격화하며 일부는 탈당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친박(친박근혜)계 위주로 구성된 당 지도부는 비주류에 “패륜”, “배신”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맹폭을 가하며 전면적인 반격에 나섰다.

비주류 모임인 비상사국회의는 21일 오후 박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징계 요구안’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징계 요구안에는 비상사국회의에 참여한 현역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동의했다고 비상사국회의의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이 전했다.

이들은 징계 요구안에 새누리당 당규 제 20조의 징계사유 가운데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헌법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적시했다. 또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당규 제 22조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이진근 윤리위원장은 조만간 윤리위를 소집,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또 전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 35명 가운데 32명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야당의 탄핵 움직임과 더불어 주목된다. 야당의 이 탈표가 없다고 가정하면 국회의 탄핵 가결 요건(200명 찬성)을 충족하는 규모다.

박 대통령 탄핵과 징계에 대해선 이처럼 비주류 진영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하는 듯 하지만, 비주류의 탈당 또는 분당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22일 오전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김무성·유승민 의원 등은 이를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비주류의 움직임에 대해 친박계는 이날 박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비주류를 향해 대대적 반격을 하기 시작했다.

전날 검찰이 박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발표한 직후 비주류가 박 대통령의 제명을 위한 당 윤리위 제소와 탄핵 등을 추진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주류가 정약한 최고위에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상황 반전을 노린 것이다.

이정현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

고위원회의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이정현을 끌어내리는 것에만 몰두했고, 그 이후에 당을 어떻게 이끌지 대한 마련이나 고뇌를 하지 않았다”면서 “그런 게 없다면 고장 난 녹음기처럼 사퇴하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라”고 말했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비주류의 비상사국회의에서 추진하는 윤리위 제소와 출당은 분명히 당규 위반”이라며 “비주류가 탈당의 명분을 세우려고 자기들끼리 출당시키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패륜 행위이고, 야당과 함께 탄핵하려는 것도 제2의 패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의를 위해 재단을 설립하지 않았고, 돈을 낸 기업들도 공익을 위해 출현했다고 하는 만큼 특검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근 사퇴한 박명재 전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친박계 박영우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野 ‘총리 추천’ 온도차

국민의당 “선 총리·후 퇴진”

민주당은 “선 탄핵·후 총리”

탄핵·하야 촛불 민심 역행 우려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총리 추천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야권의 단일대오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후임 총리 문제가 확실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 친박(친박근혜) 성향인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탄핵 정국에 맞을 수 있는 점이 야권로서는 달래마디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21일 “상황이 달라졌다”며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보이면서 야권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인선 논의를 시작할 경우 ‘탄핵·하야’를 외치는 촛불 민심을 거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추미에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도 첫째도 퇴진, 둘째도 퇴진, 셋째도 퇴진이다. 그 기초 아래서 탄핵을 검토하고 적절한 시기에 과도내각 문제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를 안 받는다는데 뭘 물어보느냐”고 반문했으며 윤관석 대변인은 “총리 추천 문제는 탄핵 관련 논의 선행하며 논의할 문제다. 앞서 갈 부분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황교안 달래마’를 감안할 때 무자정 총리 문제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선(先) 총리 인선, 후(後) 탄핵’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민심의 흐름에 휩쓸려 총리 인선을 미뤘다가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집무가 정지됐을 때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이라도 ‘선 총리, 후 대통령 퇴진’의 길을 3당이 철저하게 공조해 할 수 있도록 접촉할 것”이라며 “탄핵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 선 총리 합의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어떻게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할 여당과 총리 선임을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퇴진할 대통령과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한다”며 “(추미에 대표가) 자기 혼자 대통령을 만나러 가려 할 때는 대통령을 인정하고 여야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 못 만나겠다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총리 선임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이 박 대통령을 압박하고 야권의 단일대오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국회 추천 총리를 박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민심의 분노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고 탄핵의 명분이 더욱 강해된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

박지원 “文 오버말라”

“대통령 명예 퇴진” 발언 민심 역행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거론한 것과 관련,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오버하지 말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문 전 대표가 마치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그런 말을 하면 그것은 국민, 특히 광장의 분노를 대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문 전 대표를 비난했다. 그는 이어 “(문 전 대표의) 이런 오버된 행동 때문에 정치권이 광장의 시민들로부터 배척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주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야3당의 협이 있어야 하고 국민 요구와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유감스런 태도”라며 “민주당은 (문 전 대표의) 명예로운 퇴진 요구가 당론인지 밝혀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경북대에서 열린 시국대회에서 “정치권이 여러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저했으나 검찰 발표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고 탄핵사유가 넘쳐난다”며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촛불민심에 맞서겠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경북대에서 연 ‘대구 대학생과 함께하는 시국 대화’에서 “국민은 촛불로 퇴진운동을 해 나가고 정치권은 병행해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면서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명예롭게 물러날 길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개헌론 대표주자들 만남 2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합의제 민주주의에 기초한 제7공화국 건설 방안’ 세미나에 정세균 국회의장(왼쪽부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중헌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손학규 “野 총리 임명 시급”

동아시아미래재단 10주년 세미나...“제 7공화국 열어가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1일 ‘최소실국정농단 파문’에 따른 정국 수습방안과 관련, “하루빨리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야당 간에 합의하고, 여당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제7화

국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한 뒤 나라를 어떻게 수습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정치권 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중헌 전 비상대책위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참석, 이날 행사가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론’이 다시 불붙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손 전 대표는 강연에서 “국무총리는 거국내각을 구성해 과도정부를 이끌고 7공화국을 열어가야 하는 게 순리”라면서 “국무총리가 7공화국을 열 준비가 되는 대로 대통령은 사임하고 새 정부를 구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구제제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국정 논의가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개헌은 이제 필연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영선, 오늘 전남대서 특강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2일 오후 3시 전남대 국제회의동 용봉홀에서 ‘호남과 한국정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한다.

용봉홀로 초청으로 이뤄진 이 강연에서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부터 브렉시트와 미국 정치의 아웃사이드인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사건이 갖는 의미를 진단하고, 변혁의 물결이 일어



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과 한국정치를 선도해온 호남 정치와 연관성에 대해 얘기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새로이 한국 미래의 미래를 만들 어갈 바람직한 지도자상에 대해서도 논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이찬열, 대통령 자진사임 때 예우 박탈 개정안 발의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21일 대통령이 자진 사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박근혜 대통령 예우 박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등 위법행위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국정 운영에 혼란을 주고 자진 사임한 경우에도 탄핵이나 형사처벌처럼 연금포

함해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 박탈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는 현직 보수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 비서관·운전기사·경호·사무실·기념사업 등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 4.7% ~ 4.9%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